

일본의 네트워크형 소다자주의 민주주의 협력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2026년 06월 15일

김보 켄

게이오대학교, 교수

김보 켄 교수는 게이오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며, International House of Japan의 프로그램 총괄이사이다. 또한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Innovation and Geopolitics의 공동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의 외교 및 안보 정책, 미일 동맹,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 등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제도적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은 점차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과 공급망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반면 기존의 보편적 국제기구들은 급변하는 전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작은 규모와 높은 유연성, 그리고 기능 중심의 협력체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다. 일본은 다자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시키고 있다. 이를 ‘네트워크형 소다자주의(Networked Minilater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동맹, 삼각·사각 협력체, 경제협력체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다층적 지역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그 목적은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는 배타적 민주주의 블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양안보, 공급망 회복력, 기술표준, 인프라 연결성, 역량강화와 같은 구체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중첩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정당성 있는 지역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다자주의의 재구성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초기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네트워크화된 협력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 FOIP는 해양의 자유, 법치주의, 개방적 지역질서와 같은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으로만 인식되거나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 ASEAN)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개방성, 포용성, 공동창출(co-creation), 대화, 그리고 합의에 기반한 규범 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목표가 단순히 가치 공유국들만을 묶어 배타적 안보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일본은 동맹 협력, 소다자 협력체, ASEAN 중심 메커니즘, 경제안보 프레임워크,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서로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에서도 확인된다. 쿼드(Quad)는 해양상황인식(MDA), 사이버안보, 핵심광물, 기술표준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호주 양자협력은 상호접근협정(RAA), 해저케이블 보호, 첨단기술 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미·일 협력은 Freedom Edge 연합훈련, 해양안보 협력, ASEAN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공적안보지원(OSA) 역시 필리핀 등 국가들의 해양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전략의 핵심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있다. 각 협력체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는 역지력을 강화하고, 일부는 공급망과 인프라의 회복력을 높이며, 또 다른 일부는 특정 진영에 속하기를 원치 않는 국가들에게 실질적 역량을 제공한다. 일본은 동맹 자산을 지역 공공재로 전환하는 ‘전략적 연결자(strategic connecto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트워크형 소다자주의의 장점과 한계

네트워크형 소다자주의는 여러 장점을 가진다. 보편적 다자주의보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선언적 성격의 대규모 협의체보다 실질적이며, 조약 중심 제도보다 유연하다. 국가들은 모든 참가국의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국제질서가 불안정한 시기에 이러한 유연성은 중요한 강점이 된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미국 의존성이다. 일본은 협력을 연결하고 제도화할 수 있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만약 미국의 공약이 약화되거나 보다 거래적(transactional)으로 변한다면 일본이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 역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있다.

둘째, 제도 과잉의 위험이다. 많은 제도가 반드시 더 큰 회복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협력체 간 중복과 조정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의 수가 아니라 실제 성과다. 해양감시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공급망 다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위기 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국가들의 인식 문제다. 일본은 이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략으로 설명하지만 중국이 이를 봉쇄 전략으로 인식할 경우 안보 딜레마가 심화될 수 있다. ASEAN 국가들 역시 소다자 협력이 ‘ASEAN 중심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포용성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한국에게 일본의 네트워크형 소다자주의는 단순히 일본 외교정책의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경제·기술 환경에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오늘날 억지력, 경제안보, 기술거버넌스, 사이버안보, 해양감시, 동맹 협력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어느 하나의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미 다층적 안보환경 속에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억지력의 핵심 기반이며, 한·미·일 협력은 미사일 경보, 해양안보, 대북제재 이행, 사이버 협력, 연합훈련 측면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동맹에만 의존하는 전략을 넘어 보다 폭넓은 제도적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문제 역시 군사적 억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이버 범죄, 불법 금융, 제재 회피, 무기 이전, 우주·드론 기술, 인도주의 위기, 식량안보, 보건 및 기후위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유럽, 호주, 캐나다, ASEAN, 유엔 등과 연계된 다양한 소다자·다자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결국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한국은 강력한 억지력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기술·공급망·디지털 거버넌스·개발협력·인도주의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즉, 강한 억지력, 유연한 협력, 그리고 정당성 있는(legitimate) 지역질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네트워크형 소다자주의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중견국 외교의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핵무장을 완료한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 맞게 조정·발전시켜야 할 것이다.